주요 정책의 쟁점
(1997. 3.21~4.21)

일자	정책	주된 내용	수긍 의견	보완 의견
4.23	부실 채권 전담 기구 설치	·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 정리와 부실 징후 기업의 자구 노력 지원	· 회생 가능 기업의 조기 지원 · 부실 채권 정리로 금융 기관의 경쟁력 제고	· 담보 물건 신속 처리의 어려움 · 금리 상승의 우려
4.24	직업 훈련 개편 방안	· 직업훈련분담금제 폐지 · 직업훈련체제를 민간자율체제로 전환 · 사무직까지 포괄	· 고용 보험과의 통합으로 기업 부담 감소 · 기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실시로 훈련 효율 향상	· 직업 훈련이 더욱 소홀해질 우려 · 직업 훈련 혜택 범위의 축소 우려
5.6	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	· 중소기업 양도세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· 사회간접자본 투자 유인 · 금융실명제 보완	·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창업 활성화 · 투자 활성화 · 부실 채권 정리 지원	·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어야 함 · 부동산 등이 없는 소기업 지원 필요
5.6	공기업 민영화 특별법 제정안	· 사외이사중심제 · 동일인 지분 한도 10%로 법에 규정, 최초 정관에는 5% 내외로	· 경제력 집중의 억제 · 특혜 시비 불식	· 정부의 경영 개입 여지가 큼 · 경영 효율성 제고 가능성 낮음
5.11	공정거래법 개선 요구	·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완화 · 규제의 투명성 확보	· 경쟁 촉진, 경제력 집중 억제도 산업 경쟁력 제고와 조화 필요 · 기업 투자, 상거래 촉진	·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쉬운 중소기업의 활성화 저해 우려
5.11	규제개혁 기본법 제정 시안	· 규제 내용 법률로 규정 · 규제 영향 분석 의무화 · 규제의 시효(5년) 규정	· 경제 활성화 기대 · 규제의 명확성,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	· 규제의 경직화 우려 · 규제 감사 필요
5.13	근로자 생활 향상 및 고용 안정 지원 법률안	· 근로자주택제도 확대 · 우대저축제도 신설 · 창업 교육 훈련 지원금	· 고용 불안에 따른 생활의 불안 완화 · 근로자 복지 증진	· 지원 대상자의 폭이 너무 좁음 · 재훈련 강화 필요
5.17	중앙은행 및 감독체제 개편 방안	· 한국은행 독립성 보장 · 금융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여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	· 통화 신용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의 중립성 · 효율성 제고 · 금융 규제 완화와 금융 자율성 신장	· 금융감독위원회의 거대 기구화와 비효율 · 재경원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의 과도한 위축